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0년11월30일 ~ 12월 7일까지 (6일간)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관실에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31건 (본처분 22건), 신분상 조치 2명(경고 1명, 주의 1명), 재정상 조치 12,269천원(회수·환수)를 요구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 (명)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 회수	환급 금액	계	징계	경고 주의	기관 경고
계	31	22	9	22	6	11	5	12,269	12,269 (회수/환수)	-	2	-	1 1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조치 건수 제외

※ 신분상 조치는 인천교통공사의 자체 감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구분(공무원 훈계 → 공사 경고 등)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수범 사례 1

국비지원사업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인 「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제조·구매 설치
- 대 상 : 인천1호선 본선환기실 147개소 양방향 전기집진설비
- 사업비 : 44,1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사 업 명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19	'20	'21	'22	'23	'24
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제조구매설치	44,100 (147)	900 (3)	7,200 (24)	7,200 (24)	9,900 (33)	9,600 (32)	9,300 (31)

□ 사전 컨설팅

○ 배 경

국비지원사업인 「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부서 자체검토 결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 컨설팅을 의뢰함

○ 추진경과

- 2020. 4. 21. 사전 컨설팅 의뢰(본선환기실 전기집진설비 설치사업 시행부서)
- 2020. 5. 14. 사전 컨설팅 검토 결과 보고 및 회시(감사실)

- 특허 및 성능인증 등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공구별 분할발주 가능 여부
 - ☞ 특허제품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며, 성능인증 제품은 가능
 - ☞ 사업의 규모, 설치기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분할발주 가능
- 공인기관 성능시험성적서 미 보유업체 견적서로 비교설계 가능 여부
 - ☞ 견적가격의 적절성 검토 및 확인 후 비교설계 가능

□ 기대효과

- 사업부서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사업부서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수범사례 2

공사 임직원 전용 모바일 APP 자체 개발

공사 임직원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모바일 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APP)을 자체 개발하여 직원 편의기능 제공 및 업무효율성 강화

□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모바일 업무지원을 위한 직원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자체 개발

□ 추진실적

- 안드로이드, iOS, WEB 기반의 하이브리드 APP 개발 및 운영
- APP 주요 기능 및 상세 화면
 - 공사 주요 공지사항/경조사/안전 관련 알람 기능
 - 공사 업무현황/웹메일/복지사이트 연결 기능
 - 점검표준매뉴얼, 유지보수매뉴얼 등 전자매뉴얼 탑재



□ 기대효과

- 모바일 기반의 업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직원 편의기능 제공 및 직원간 소통능력 향상
- 유료 문자메시지 발송기능 대체 및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절감
- 장애조치 절차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전자 매뉴얼 탑재로 이태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력 제고

월미관광특구 내 연이은 사업실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모노레일 시설을 활용, 새로운 차량 운행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인천의 대표적 관광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 사업비 : 금18,3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2. 13 ~ 2019. 6. 27 (561일간)
- 사업내용 : 기존시설(6.1km, 정거장 4개소) 활용, 신규 궤도차량(모노레일) 설치

《 운행시스템 구축현황 》

- 차량 : 46인승 5편성(2량1편성, 길이15.3m×폭2.38m×높이3.54m)
- 궤도 : 3선 레일(전구간 6.1km, 단선구간 3.9km) 설치 등
- 전력방식 : 배터리 방식, 배터리 자동교환시스템 설치 등
- 신호/통신 :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겸용, 신호방식 이중화(와이파이, LTE) 등
- 안전설비 : 전구간 비상대피로, 차량 실내 및 역사 내 CCTV설비 설치 등

□ 추진경과

-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계약 체결 : 2017. 12. 13.
- 실시설계 안전도검사, 궤도사업변경허가 등 인허가 절차 : 2018. 2 ~ 8월
- 운행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완료(궤도, 신호 등) : 2019. 4. 30.
- 구축시스템 기술시운전, 기술검증 및 영업시운전 : 2019. 1 ~ 6월
- 준공검사(계약, 궤도사업, 도시계획시설) : 2019. 6 ~ 7월
-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시보) : 2019. 8. 5.
- 월미바다열차 개통 : 2019. 10. 8.

□ 추진실적

○ 안전관리시스템 및 운행안전성 고도화

- 기술 및 영업시운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차량 및 시스템 품질 개선, 비상대응능력 강화
- 시민단체 및 감독기관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훈련(2회), 지역주민 등 시승점검(67회), 차량 동력전달장치 개선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6회)

○ 운영기반 구축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이용요금 다양화 및 탄력적 운영(지역주민 등 공론화 의견 적극적 반영)
- 운영규정(월미바다열차 이용약관, 궤도안전관리내규, 운영관리내규) 제정
- 직원 교육훈련(운영요원 양성교육, 수동운전교육, 관광해설 양성교육) 실시
- 인터넷 예매서비스 개시, 차량 냉방성능 향상, 전역사 무료 Wi-Fi 서비스 설치, 교통약자 배려 박물관역 E/V 추가 설치(2021. 4월 예정)

○ 관광인프라 구축

- 네이밍·로고·캐릭터 선정, 차량래핑(5편성), 관광해설사 배치(평일·주말), 옥상 일몰전망대 및 포토존 조성, 월미바다열차 테마역사 조성
- 인천내항 사일로(원통형 곡물창고) 미디어파사드 운영(2020. 12월부터), 월미바다열차 상부구조물(Gider : 거더) 경관조명 설치(2021. 6월 예정)

○ 전방위 홍보 “월미바다열차 관광브랜드 확립”

- 지상파TV, 1인 미디어 등 방송 노출 및 언론 보도
- 홍보영상 표출 및 현수막·포스터 게첩(전국도시철도 968개 역사 등)
- 국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6회),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
- 유명 상품(기업)연계 홍보 비예산 유치(소성주, 월미도유람선 등)

□ 기대효과

○ 실패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종식 및 지역사회 숙원사업 해결

○ 성공적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 관광산업 발전 견인

- 개통 70일만에 9만명 돌파! (월미도 30%, 차이나타운 40%, 월미공원 60% ↑)
- 전국 관광객 지속 증가, ‘SBS런닝맨’ 등 지상파TV 집중 조명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 처분목록(22건)

연 번	분 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 고
				행 정 상	재 정 상 (천 원)	신 분 상	
1	인 사	업무직 근무평정 소홀	○처 ○팀 등 7개	주의			
2	복 무	건강검진 관련 근태관리 소홀	○처 ○팀 등 6개	시정· 개선			
3	사 업	대행사업의 정산 지연	○처 △팀 등 3개	주의			
4	행 정	청문절차 소홀	○처 ○팀	주의			
5	행 정	취업규칙 미신고	○처(○팀, △팀)	주의			
6	복 무	사원증 관리 소홀	○처 ○팀	개선			
7	계 약	부정당제재 처분 소홀	○처 ○팀	시정· 주의	회수 1,095	경고 주의	
8	계 약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처 ○팀	주의			
9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실 ○팀	주의			
10	계 약	선금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처 ○팀	주의			
11	계 약	용역계약 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처 ○팀	시정	환수 1,726		
12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사업소○팀	시정	환수 9,448		
13	버스운영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적용 관한 사항	☆처 ○팀, △팀	주의· 개선			

연 번	분 야	제 목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 고
				행 정 상	재 정 상 (천 원)	신 분 상	
14	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	◎처 ○팀 ♠처 △팀	개선			
15	물 품	물품 정수책정 업무 소홀	○처○팀	주의			
16	물 품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처 ○팀 등 14개	시정. 주의			
17	회 계	부정승차자 부가금 납부 관리 소홀	○처 ○팀	시정			
18	건 축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사업소○팀	주의			
19	건 축	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처 ○팀	주의			
20	설 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처 △팀	개선			
21	차 량	월미바다열차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사업소 △팀	개선			
22	차 량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에 관한 사항	○처 △팀	권고			

[일련번호 1]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직 근무평정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처(○팀), □처(○팀),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팀), ♠사업소(○팀)

내 용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3조에 따르면 업무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정원의 인원으로 무기업무직과 기간제업무직으로 구분하고, “관리부서”는 업무직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인사담당 부서이고 “운영부서”는 업무직 근로자를 직접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20. 12. 3.기준 현재 인천교통공사에는 [표 1]과 같이 버스관리원, 콜택시관리원 등 총 894명이 근무중이다.

【표 1】 업무직 현황

(단위 : 명 / 2020.12. 3. 기준)

분야별	총 계	버스관리원	콜택시 관리원	시설관리원	택시센터관리원· 업무용차량관리원	*기타업무직
정 원	899	177	186	494	2	40
현 원	894	178	186	487	2	41
과부족	△5	1	0	△7	0	1

* 기타업무직 : 승강대관리원, 버스정비원, CNG충전원, 사무보조원, 영양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같은 내규 제6조에는 운영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직원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연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규 제24조 제2항·제4항에는 따라 근무성적평가는 업무직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별표3]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역)의 장을 1차 평가자로, 평가자의 상급부서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처 ○팀의 업무직 근무평정 실시계획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관련 근무성적 평정표를 ○처 ○팀으로 제출하고, ○처 ○팀에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해당 평정결과는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제17조·제18조 제5호에 따라 전동차 정비원에게 보전수당을 차등지급시에 반영하고,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제3조 제6호·제8호에 따라 기타업무직의 평가급 지급률에 적용하며,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0조 제4항 및 「축탁직(기간제업무직)제도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축탁직¹⁾ 재고용 평가시 근무성적평가 점수(15점)를 반영한다.

○처 ○팀의 “2019년도 업무직 근무평정 실시계획 ○처 ○팀2019-9352 : 2019.12. 3)”에 따라 해당 운영부서에서는 근무평정을 실시 후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업무직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기재 오류 등이 있었다.

☆사업소 평정대상자 1명은 근무성적 평정표 총점합계 오류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 오류로 단계(순위) 하향 평정되었다. 또한 ♠사업소 평정대상자 1명은 근무성적 평정표 항목별 총점 미기재 및 서열명부 총점 오류로 1단계(순위) 상향 평정, ◎사업소 평정대상자 1명은 서열명부의 총점합계를 착오 기재하여 2단계(순위) 상향 평정되었다.

아울러 ♠사업소 등 8개 운영부서에서는 근무성적 평정표 항목별 총점을 미기재,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 감점 관련 오류 작성으로 총점 오류 등이 있었다.

한편 「업무직의 채용 및 관리내규」 24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직 직원 근무성

1)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축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적 평정표[별표 3]의 종합평정 의견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 등 6개 운영부서는 종합평정의견을 미기재하였다.

따라서 ♠사업소 등 8개 운영부서에서는 2019년 업무직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상기와 같이 업무직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를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작성하였다.

또한 업무직 관리부서인 ○처 ○팀에서는 “2019년도 업무직 근무평정 실시계획” 관련 해당 운영부서의 업무직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의 직무수행태도 평가 작성 오류, 항목별 총점 미기재 등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사업소 등 8개 운영부서가 제출한 서열명부의 오류 등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확인없이 업무직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업무직 운영부서와 ○처 ○팀은 업무직 근무평정이 전동차 정비원에게 보전수당을 차등지급, 기타업무직의 평가급 지급률에 적용, 촉탁직 재고용 평가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반영에 활용되는 근거임에도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간의 “임금협약 부속합의서”(2020.11.24.)에 따라 2021년부터 평가급 지급대상을 기타업무직에서 업무직 평가급(버스관리원 제외)으로 확대함에 따라 평가급의 지급목적에 부합되도록 근무평정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업무직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건강검진 관련 근태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처(○팀, △팀), □처(○팀), ◇실(○팀), ☆실

내 용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제73조 제1항에는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진단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는 해당자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철도안전법」 제12조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소속장²⁾은 매일 소속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의 근태관리를 하여야 하고, 근태관리부서에서는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인천교통공사 「경영정보관리내규」 제20조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설치된 부서는

2) “소속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직원(취업규칙 제3조 제2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체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권한, 자료 수정, 출력 등 자료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산작업의뢰서[별지2호]로 정보관리 부서에 처리를 의뢰한 후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근태(휴가 등) 연계 사용자 매뉴얼”(2019. 2. 인천교통공사 정보전산팀)에는 근태일자 마감 후에는 △처 ○팀과 △처 ☆팀으로 전자결재시스템(MIS)에 근태처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1. 건강검진 실시 출장등록·사용 관리 소홀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단체규약에 따라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출장으로 반차 범위내에서 등록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본사 임직원의 2019년 건강검진시 등록한 출장기록을 확인결과 건강검진후 추가적인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을 등록·사용 또는 건강검진일과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일이 불일치하였다.

사유별로 구분하면 □처 ○팀 소속 업무직 갑 등 7명은 근무 후 정기휴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 후 다른 날짜에 출장(검진)을 등록·사용하였고, 교통복지팀 업무직 정우진은 병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실시 후 다른 날짜에 출장(검진)을 등록·사용하였다.

△처 ○팀 일반직 관리 3급 을 등 4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건강검진을 보류 후, 다음 날에 복무담당하는 총무인사팀 및 노사협력팀으로 전산작업의뢰서를 제출하여 출장(건강검진)을 휴가로 정정처리하지 않았다.

□처 ○팀 일반직 사무 4급 병 등 2명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추가검진 목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추가 사용했으나, 총무인사팀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고혈압과 당뇨 질환의 재검사 경우에만 출장을 추가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이 건강검진을 위해 보장한 출장을 목적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복무에 소홀하였다.

2. 건강검진 관련 규정 보완 및 전자결재시스템 보완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출장으로 사용하되 반일이고 여비지급대상이 아니며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한정으로 재검사시 추가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사용가능 등의 명확한 규정 등이 없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업무특성상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의 3종류의 건강검진이 있고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출장³⁾을 허용하는 것이 있어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출장(건강검진)의 사용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전자결재시스템의 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과 일반 출장을 구분하여 자료 추출이 용이하지 않아 복무관리가 곤란하고 출장여비 지급 등의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① [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출장시간을 소멸한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 또는 기 지급한 연차휴가보상수당에서 환수하거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13조 및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제14조에 따라 해당 월의 결근으로 처리 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2020년 종합감사범위 중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 등록·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처리 후 결과보고 하시고, 소속장 및 근태관리부서(총무인사팀)는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고혈압 및 당뇨병환 재검사,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검사

[개선] ① 건강검진시 사용하는 출장의 시간, 여비지급여부, 건강검진 결과통보에 따른 재검사의 출장 가능여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천교통공사 전자결재시스템의 일반 출장과 건강검진 목적의 출장을 구분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대행사업의 정산 지연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팀), △원(○팀)

내 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66조 및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25조 제6호에 따르면 공사가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할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위탁자인 인천광역시로부터 반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수탁 받은 “ㄱ 운영” 등 총 8개 사업의 최근 3년간 대행사업 정산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처 ○팀은 “ㄴ유지관리” 사업종료(매년 12월31일)후 다음연도 3월에 정산보고 하였으나, ○처 △팀 등 3개 부서는 다음연도 5월, 6월, 8월에 지연하여 각각 정산보고함으로써 집행잔액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저하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보고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청문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및 자동차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을 통해 인천교통공사에게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조 규정의 ‘행정청’에 인천교통공사가 포함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부서의 기준을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감사대상기간 중 7회의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7회 청문 모두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청문주재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계

약부서 소속 팀장인 ○팀장이 청문을 주재함으로써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청문주재자의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청문절차 진행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취업규칙 미신고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팀)

내 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각 호의 사항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4)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판 97누14132 1998.11.27.)

인천교통공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일반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6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업무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를 8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각각 취업규칙 개정 신고하여야 하나, 「취업규칙」은 3회,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은 2회에 걸쳐 각각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사원증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인천교통공사 「사원증 관리내규」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 사원증은 역사 및 제한 출입 등의 기능을 가지며 사장은 필요 시 부가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이음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할 때 또는 사원증의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규 제9조에 따르면 사원증 발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원증 사용실태를 점검·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내규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원증의 역사 및 제한구역 출입 기능과 관련하여 「사원증 관리내규」 상 해당 출입권한을 업무 수행 여부로 제한⁵⁾하거나, 휴직자 및 장기 병가자에 대한 사원증 반납규정이 없어 휴직 및 병가자가 사원증으로 업무와 무

5) ◇서울교통공사(휴직자 교통카드 기능 정지), ◇서울메트로9호선(게이트 패스 기능 없음), ◇대전도시철도공사(휴직 사유 발생 시 사원증 기능 정지), ◇대구도시철도공사(휴직으로 연속하여 3개월 초과 직무 이탈 사유가 발생 시 사원증 기능 정지), ◇광주도시철도(게이트 패스 기능 없음)

관하게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원증 사적 용도(교통카드) 사용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휴직자 및 병가자에 대한 사원증 사용실태 점검도 시행한 적이 없다.

【표 1】 인천교통공사 휴직자 사원증 사용 내역

연번	사원번호	사원명	사용횟수
1	a	A	20
2	b	B	18
3	c	C	2
4	d	D	1
5	e	E	8
6	f	F	6
7	g	G	50
8	h	H	4
9	i	I	2
10	j	J	4
11	k	K	8
12	l	L	8
13	m	M	75
14	n	N	20
15	o	O	4
16	p	P	10
17	q	Q	7
18	r	R	30
19	s	S	8
20	t	T	2
21	u	U	9
22	v	V	4
23	w	W	2
24	x	X	19
25	y	Y	9
26	z	Z	4
27	aa	AA	12
28	bb	BB	2
29	cc	CC	4
30	dd	DD	4
31	ee	EE	2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인천교통공사 병가자 사원증 사용 내역(30일 이상)

연번	사번	성명	사용 횟수
1	ff	FF	15
2	gg	GG	11
3	hh	HH	6
4	ii	II	5
5	jj	JJ	11
6	kk	KK	5
7	ll	LL	48
8	mm	MM	1
9	nn	NN	10
10	oo	OO	11
11	pp	PP	18
12	qq	QQ	2
13	rr	RR	38
14	ss	SS	14
15	tt	TT	1
16	uu	UU	51
17	vv	VV	1
18	ww	WW	9
19	xx	XX	3
20	yy	YY	2
21	zz	ZZ	9
22	aaa	AAA	4
23	bbb	BBB	93
24	ccc	CCC	10
25	ddd	DDD	3
26	eee	EEE	25
27	fff	FFF	2
28	ggg	GGG	7
29	hhh	HHH	11
30	iii	III	19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개선] 사원증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부정당제재 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되, 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⁶⁾·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 기간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을 통해 인천교통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조의 ‘행정청’에 인천교통공사가 포함된다.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제129조에 따르면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표]와 같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해당 되어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였으며 「ㄱ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가 계약 미체결 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사실과 계약 미체결에 대한 사과 표시, 업체 대표의 개인적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하여 결정하였고, 「ㄴ 설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규격서

일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해당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직원 고용불안 및 폐사의 생존권이 달려 선거를 바란다는 해당업체의 의견을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해 결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의견은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적은 기간을 부과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만약 주관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어야 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ㄷ 용역」에 대하여 계약의무 미이행에 따라 해당업체가 제출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상의 계약보증금이 인천교통공사로 귀속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2019.12.27. 입찰참가제한 통보 시 계약보증금 납부를 요청한 이후 독촉 등의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계약보증금이 인천교통공사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거쳤을 경우에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제재처분 결정이 있는 날로 「ㄴ 설치」 건은 20일, 「ㄱ 용역」 건은 16일 지난 시점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ㄷ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보증지급각서 상의 계약보증금 1,094,610
원을 귀속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계약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2. 하자보수보증금 및 3.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제129조에 따르면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 기간 동안 21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40건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13건에 대해서는 하자만료검사 기간(하자만료일 이전 14일~하자만료일)을 준수하지 않고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였고, 327건에 대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 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완료를 위한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관련규정에 따른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실(○팀)

내 용

1. 제안서 위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기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표 1]과 같이 제안서 예비명부를 작성하면서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 9명을 포함하였고 입찰참가자가 추천하여 선정한 평가위원 7명 중 3명이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이었다.

【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결과

고유번호	소 속	성 명	선임여부	그룹	추천결과
1	■ ■ 공사	A	선임	외부1군	1
2	◆ ◆ 공단	B	예비	"	1
3	★ ★ 공사	C		"	
4	♠ ♠ 공단	D	예비	외부2군	
5	♥ ♥ 공단	E	선임	"	2
6	♣ ♣ 공사	F		"	
7	▼ ▼ 공사	G	선임	외부3군	2
8	◀ ◀ (주)	H		"	
9	● ● 공단	I	예비	"	
10	◀ ◀ (주)	J	선임	외부4군	1
11	● ● 공단	K		"	
12	▣ ▣ 협회	L	예비	"	1
13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M	선임	외부5군	1
14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N	예비	"	1
15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O		"	
16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P		외부6군	
17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Q	예비	"	1
18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R	선임	"	1
19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S		외부7군	
20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T	선임	"	2
21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U	예비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교통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업체선정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업체

선정 시부터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는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내 산업안전보건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위임을 받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의견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의견 및 참여가 중요하다면 제안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되고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위원 자격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및 배점한도 조정사유 미명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20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조정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기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고 [표 2]와 같이 제안서평가 시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을 각 5점씩 부여하여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총10점 중 50%로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30%를 초과하였으며 정량적평가(20점→10점)와 정성적평가(60점→70점)의 배점을 10점 조정하면서 그 사유를 입찰 공고 시 명시하였어야 하나 명시하지 않았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10점)	소 계	10
		▪ 3년 이내 이행 완료한 동일 실적	5
		▪ 신용평가등급	5
	정성적평가 (70점)	소 계	70
		▪ 전문가 수준	5
		▪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용역이행 실적	5
		▪ 조사평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5
		▪ 수행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적정성	5
		▪ 핵심인력 등 인력투입의 적정성	5
		▪ 교육실시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5
		▪ 조사 및 평가 방안의 적정성	5
		▪ 개선방안 도출의 적합성 및 체계성	5
		▪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과업수행 관리의 체계성	5
		▪ 조사 평가방법 적정성	5
		▪ 과업수행 결과 및 보고서 구성	5
		▪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안성	5
		▪ 사후관리(개선방안 이행 등)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20점)	▪ 가격의 적정성	2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8(회계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이 때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고 채권확보도 소홀히 하였다.

【표】 채권확보 부적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선금지급일	선금지급액	비고
1	ㄴ 사업	2020-05-07~ 2020-09-03	77,976	2020-08-13	22,000	보증 증권 미징구
2	ㄷ 사업	2020-06-25~ 2020-09-22	256,220	2020-06-30	179,35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8(회계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산의 범위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ㄱ 용역’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 사항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표]와 같이 사후 정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여 정산하였어야 하나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총금액을 인정하여 정산해 1,726,167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ㄱ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계약금액	보험 정산항목	교통공사 보험료 인정액①	보험료 정당 인정액②	보험료 착오 정산액①-②	착오정산 사유
96,821,469원	합계			1,726,167	보험료 납입내역서의 사업주와 개인부담금 모두 인정
	국민연금	1,321,640	660,820	660,820	
	건강보험	1,637,994	983,750	654,24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67,894	99,000	68,894	
	일반관리비	6,151,863	6,041,147	110,716	
	이윤	3,928,439	3,853,871	74,568	
	부가가치세	8,697,860	8,540,935	156,92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과다 지급한 용역 보험료 1,726,167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사업소(○팀)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75조(과태료) 제4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준공 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천교통공사의 산업안전보건비가 정산된 공사 3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입력한 후 조회 한 결과 [표 1]과 같이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 4건의 발급한 내역이 없다고 조회되었다.

【표 1】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18.7월 제출)

발주부서	사업명	계약금액	산업안전 보건비 계상액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				정산액
				사용항목	사용내역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확인	
○팀	□공사	1,489,551 천원	25,363 천원	총합계		20,500천원		4,863 천원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합계	20,200천원		
					안전용품외	7,525천원	발급내역 없음	
					안전용품외	3,880천원		
					안전용품외	7,065천원		
					안전용품외	1,730천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기술지도비	300천원	확인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기간 중 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국세청 홈택스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이용

하여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입력한 후 조회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 4건의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준공 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여 9,448,4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었다.

【표 2】 업체 소명자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감사기간 중 제출)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재검토

구 분	내 역	기존 제출자료 (2018. 7.)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2020.12.)			차액(원) (①-②)	비고
		수량	단가	금액(원)①	수량	단가	금액(원)②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화	90	75,000	6,750,000	90	40,000	3,600,000	3,150,000	
	방독 마스크	80	55,000	4,400,000	80	24,000	1,920,000	2,480,000	
	방진필터	735	5,000	3,675,000	735	4,400	3,234,000	441,000	
	안전모	90	6,500	585,000	90	3,000	270,000	315,000	
	각반	90	4,000	360,000	90	1,900	171,000	189,000	
	방진복	50	5,000	250,000	50	2,540	127,000	123,000	
	안전 벨트	90	45,000	4,050,000	90	15,000	1,350,000	2,700,000	
	소화기	4	27,000	108,000	4	10,000	40,000	68,000	
	받침대	4	3,000	12,000	4	2,500	10,000	2,000	
	안전 테이프	1	10,600	10,600	1	30,200	30,200	△19,600	
	소 계			20,200,600			10,752,200	9,448,400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기술 지도	1	300,000	300,000	1	300,000	300,000	-	
	소 계			300,000			300,000	-	
합 계				20,500,600			11,052,200	9,448,400	

[세금계산서 목록]

연번	작성일자	승인번호	금액(원)	용도외 금액	인정가능 금액	비 고
1	2018-02-28	20180228-41000007-ㄱㄱ	3,919,500	499,500	3,420,000	안전용품
2	2018-03-31	20180331-41000007-ㄴㄴ	3,634,100	44,100	3,590,000	안전용품
3	2018-04-30	20180430-41000007-ㄷㄷ	1,999,600	79,600	1,920,000	안전용품
4	2018-05-31	20180531-41000007-ㄹㄹ	1,051,000	120,800	930,200	안전용품
5	2018-06-30	20180630-41000007-ㅁㅁ	892,000	-	892,000	안전용품
6	2018-05-31	20180531-10000000-ㅂㅂ	100,000	-	100,000	기술지도
7	2018-06-30	20180630-10000000-ㅅㅅ	200,000	-	200,000	기술지도
합 계			11,796,200	744,000	11,052,2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48,40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3]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적용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팀)

내 용

1. 주의 및 경고 등 처분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5장 제39조(주의) 제2항에 따르면 노선담당자, 운전원은 무단지각 한 경우,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민원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정된 피복을 미착용한 경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본인 과실 50% 이상으로 보상액 50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운행 전 음주 측정치가 0.01% 이상 0.02%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제40조(경고) 제2항에 따르면 지각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결행 또는 지연된 경우, 무단조퇴한 경우, 1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교통안전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노선변경, 결행, 단축운행, 무정차, 연장운행 등 운행계통을 위반한 경우, 운송요금 징수 및 관리를 조홀히 한 경우, 제39조 제2항에 따른 최초 주의 처분시점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31부터 적용, 그 이전은 제39조 제2항에 따른 2회 이상의 주의를 처분 받은 경우), 본인과실 50% 이상으로 보상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 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행 전 음

주측정치가 0.02% 이상 0.03%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직원들 간의 이간, 유언비어 유포, 불화 조장 등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 ☆처 ○팀과 △팀의 처분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고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40조(경고) 제2항 4호 ‘제39조 제2항에 따른 최초 주의 처분시점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31부터 적용 그 이전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2회 이상의 주의를 처분 받은 경우)’ 운전원에 대한 경고 처분 할 수 있다’의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팀은 1회 주의 처분 이후에 주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경고 처분을 하여 운전자는 주의1건, 경고 1건의 처분을 받게 되고 △팀은 주의 처분 이후에 주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로 주의 처분을 하고 이후에 경고 처분을 하여 운전자는 주의 2건, 경고 1건을 받게 된다.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를 적용하고 있는 두 개의 부서가 해석을 다르게 하여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분의 차이가 발생했다.

【표 1】 경고 및 주의 처분 현황(주요 예시)

[○팀(※동일 형태 처분자 13명 미포함)]

연번	이름	발생일자	처분일자	교통공사 처분	사유
1	A	18.7.6	18.7.10	주의	지각
	A	18.7.8	18.7.31	경고	지각 주의누적 (18.7.10)
		처분건수 : 주의1건, 경고1건으로 총 2건			
2	B	19.09.04	20.01.16	주의	교통사고
	B	20.01.16	20.05.14	경고	교통사고 (주의누적)
		처분건수 : 주의1건, 경고1건으로 총 2건			

[△팀 (※동일 형태 처분자 9명 미포함)]

연번	이름	발생일자	처분일자	교통공사 처분	사유
1	C	18.10.12	18.11.7	주의	접촉사고
	C	18.11.22	18.11.28	주의	주의의무위반
	C		18.11.29	경고	주의2회 누적
		처분건수 : 주의 2건, 경고1건으로 총 3건			
2	D	19.11.26	19.12.02	주의	접촉사고
	D	20.40.03	20.04.06	주의	불친절민원
	D	20.04.06	20.04.17	경고	주의2회 누적
		처분건수 : 주의 2건, 경고1건으로 총 3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주의 및 경고 처분 횟수는 업무직 근무평정에 반영되고 이는 근무평정서의 직무수행태도 평가 지표(10점)에 해당되어 횟수에 따라 각1점씩 감하게 된다.

2018년 업무직 근무평정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팀 A은 주의 1건, 경고 1건으로 2점이 감점되고 △팀의 B는 주의 2건, 경고 1건으로 3점이 감점되어 같은 내규를 적용하는 두 부서가 처분을 달리하여 업무직 근무평정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9년 업무직 근무평정에는 △팀은 근무평정 시 처분3건 중 주의1건을 감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주의 및 경고 처분 방법에 대한 해석은 부서 간 차이가 있다.

2. 버스 교통불편신고 접수 건에 대한 관리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6조(운전의 임무) 제5항에 따르면 운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승

차하게 하는 행위, 여객이 승차할 경우 여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운행노선에 따라 지정된 출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40조(경고) 제2항에 따르면 임의로 노선 변경, 결행, 단축운행, 무정차, 연장운행 등 운행계통을 위반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조사의 준수 사항)에 따라 ●●구청에서 송부한 ‘버스 교통불편신고접수 차량 의견 제출에 관한 통보’ 공문에 따르면 2017~2020년 현재까지 버스 주요 위반 사항은 [표 2]와 같고 버스 주요 위반사항 항목 중 무정차통과는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처분을 하지 않았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은 주의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나 처분 없이 구두교육으로 처리하였다.

【표 2】 버스 교통불편신고 사전 행정처분 내역 - ●●구청

(단위:건)

연도	총계	과태료 사전 처분			주의 (운수업체 자체 교육대상)
		합계	무정차통과 승차거부,배차시간미준수, 정류소외 승하차	기타 (난폭운전, 불편 등)	불친절
	161	108	86	22	53
2017	54	36	36	0	18
2018	31	20	16	4	11
2019	58	40	27	13	18
2020	18	12	7	5	6

인천교통공사 ○팀에서는 해당 운전원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버스CCTV 녹화자료 보존기간 7일이 지나 증빙이 불가하여 경고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은 민원신고만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주의 처분하지 않

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구청에서 통보한 버스 교통불편신고 증빙자료의 근거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로서 신뢰성이 있다는 점, 의견서 제출 시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교통공사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운전원이 운행계통위반(무정차 통과 등)을 했을 경우 민원인이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해당운전원은 경고 처분을 받고 해당 구청을 통해 불편신고 접수를 하면 해당운전원은 과태료 납부로 끝나게 되는 등 같은 행위에 대한 처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구청에서 통보한 버스불편신고 건수는 161건(2017~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으로 인천교통공사 행정처분건수 151건(2017~2020년 감사일 현재)과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관할 구청에서 통보된 행정처분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 등 버스불편신고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구청에서 통보한 ‘버스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에 대해 위반 사례별 처리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버스불편신고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4]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처(△팀)

내 용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9.12)」 제2장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행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었으나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20개 위원회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경영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조항 및 사규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로 정하고 있어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9.12)」에 맞지 않다.

【표】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근거	개선 필요 사항
1	경영조정위원회	경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내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이행지침	경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
3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	사회적 가치실현 추진 기본계획	
4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내규	
5	인사위원회 (일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시행내규	결정을 위한 표결에는 위원장도 참석하며 결과가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운영내규	심의회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개최를 요청하였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	사규심의위원회	사규관리규정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내용결정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개선] 경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내규, 정보공개운영내규 중 위원회 의결 관련 조항을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라며 사규심의위원회는 운영계획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정수책정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물품 관리)에 따르면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소관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및 「물품관리지침」을 제정·수립하여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65조(정수책정)에 따르면 물품관리 책임자⁷⁾는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 주요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물품관리지침」 V.물품의 관리와 제도 2. 정수 관리에서는 정수를 사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수책정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일을 예산 확정일로 관리하고 있다.

7)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 : 물품관리책임자는 본사의 물품관리부서 본부장

그러나, 공사 물품총괄관리부서(○팀)에서는 2017. 9월 이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구입한 정수물품 중 14개부서 48개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표] 와 같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수책정을 확정하여, 물품의 정수책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정수책정 확정 현황

(단위 : 개, 천원)

연번	부서명	물품명	수량	정수확정일	예산확정일
계			48		
1	△사업소	냉, 난방기	4	2017-09-06	2016-11-21
2	□사업소	냉난방기	3	2018-08-17	2017-11-21
3	□사업소	냉,난방기	1	2018-08-17	2017-11-21
4	□사업소	냉장고, 세탁기	13	2019-08-26	2018-04-30
5	△팀	공기청정기	1	2018-09-04	2017-11-21
6	△팀	냉난방기	1	2019-09-04	2017-11-21
7	□팀	세척기, 고압	2	2018-08-14	2018-04-30
8	□팀	세척기, 부품	1	2019-08-28	2018-04-30
9	◇팀	냉방기	1	2020-09-22	2017-11-21
10	☆팀	냉난방기	4	2017-12-05	2016-11-21
11	◎팀	냉난방기	1	2020-08-28	2017-11-21
12	♠팀	냉난방기	4	2020-09-04	2018-11-19
13	♡팀	게이지, 차륜	1	2019-08-28	2016-11-21
14	♣팀	세탁기	1	2020-08-27	2018-04-30
15	●팀	오실로스코프	1	2018-04-06	2017-11-21
16	●팀	냉난방기	1	2019-08-28	2018-11-19
17	●팀	유도가열기	2	2019-08-28	2018-11-19
18	▣팀	냉장고	3	2020-09-09	2019-05-13
19	◆팀	냉난방기	1	2020-09-04	2018-11-19
20	●팀	냉장고	2	2020-04-07	2020-03-19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정수물품 구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이전에 정수책정을 확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6]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팀), △처(○팀, △팀), □처(○팀, △팀), ◇사업소(○팀),
☆사업소(○팀, △팀), ◎사업소(○팀), ♡원(○팀), ♡사업소(○팀),
♣사업소(○팀, △팀)

내 용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를 제정하여 업무용 차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업무용 차량 표시 부착 소홀

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제7조(차량 관리)에 따르면 차량관리자⁸⁾는 공사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을 구성하고, 표시크기는 표시위치 면적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하며, 운전석이나 조수석 옆문(승용, 화물) 또는 차량의 중간 부분(승합)에 고정형을 부착하여 업무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일 현재 운행·관리 중인 업무용 차량 13개팀 48대의 차량 중 10개팀 16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표 1] 과 같이 업무용 차량 표시를 미부착(3개팀, 5대)

8)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제3조(용어의 정의) : “차량관리자”라 함은 실제로 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위치와 다른 곳에 부착(7개팀, 11대)하여 운행하고 있다.

【표 1】 업무용 차량 표시 미부착 및 위치 부적정 부착 현황

연번	관리부서(팀)	차량번호	차종	업무용 차량 표시	
				적정여부	부착 위치
1	□팀	○	승합	미부착	
2	□팀	△	승합	미부착	
3	◇팀	□	승합	미부착	
4	◇팀	◇	승용	미부착	
5	☆팀	☆	승합	미부착	
6	◎팀	◎	화물	위치 부적정*	운전석 앞유리, 차량 후면부
7	◎팀	♠	화물	위치 부적정	차량 전면부, 후면부
8	◎팀	♡	승합	위치 부적정	보닛 위, 차량 후면부
9	♠팀	♣	승용	위치 부적정	차량 후면부 옆면
10	♡팀	●	승용	위치 부적정	보닛 위
11	♡팀	■	승합	위치 부적정	보닛 위, 운전석 옆문
12	♣팀	◆	승합	위치 부적정	차량 후면부 옆면
13	♣팀	◐	화물	위치 부적정	차량 전면부, 후면부 옆면
14	●팀	◑	승용	위치 부적정	뒷좌석 옆문
15	■팀	○○	화물	위치 부적정	차량 전면부, 운전석 옆문
16	◆팀	△△	승용	위치 부적정	뒷좌석 옆문

* 적정 부착 위치 : (승용, 화물) 운전석이나 조수석 옆문, (승합) 차량의 중간부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주간차량점검표 작성·관리 소홀

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제9조(차량 정비)에 따르면 차량관리자는 주 1회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운행·관리 중인 업무용 차량 13개팀 48대 차량 중 6개팀 31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표 2] 와 같이 감사기간(2017. 9월 ~ 2020. 11월) 주간 차량점검표를 미관리(3개팀 6대)하거나, 일정 기간 및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일부만 관리(4개팀 25대)하고 있어 주간점검표에 따른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주간차량점검표 미관리 및 일부관리 현황

연번	관리부서	차량번호	차종	주간점검표 관리	
				관리 여부	관리 세부사항
1	◎팀	◎	화물	미관리	
2	◎팀	♠	화물	미관리	
3	◎팀	♡	승합	미관리	
4	●팀	□□	화물	미관리	
5	●팀	◇◇	승합	미관리	
6	◐팀	☆☆	승합	미관리	
7	◇팀	◇	승용	일부관리	전기차임에도 엔진오일 점검항목으로 점검 2017.~2018.3월 점검사항 누락
8	◇팀	◎◎	화물	일부관리	
9	♡팀	●	승용	일부관리	주간점검표에 따른 점검 미실시(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일일점검등록 실시), 일일점검 등록사항에 주간점검표 점검항목의 일부 항목 (엔진오일상태, 냉각수상태, 에어크리너 상태, 케이블 및 벨트 상태) 미반영
10	♡팀	♠♠	화물	일부관리	
11	♡팀	♡♡	화물	일부관리	
12	♡팀	♣♣	화물	일부관리	
13	♡팀	●●	화물	일부관리	
14	♡팀	■■	화물	일부관리	
15	♡팀	◆◆	화물	일부관리	
16	♡팀	◐◐	화물	일부관리	
17	♡팀	◐◐	화물	일부관리	
18	♡팀	○○○	화물	일부관리	
19	♡팀	△△△	화물	일부관리	
20	♡팀	□□□	화물	일부관리	
21	♡팀	◇◇◇	화물	일부관리	
22	♡팀	☆☆☆	화물	일부관리	
23	♡팀	◎◎◎	화물	일부관리	
24	♡팀	♠♠♠	화물	일부관리	
25	♡팀	♡♡♡	화물	일부관리	
26	♡팀	♣♣♣	화물	일부관리	
27	♡팀	●●●	화물	일부관리	
28	♡팀	■	승합	일부관리	
29	♣팀	◆	승합	일부관리	2017.~2018. 점검사항 누락
30	♣팀	◐	화물	일부관리	2017.~2018. 점검사항 누락
31	●팀	◐	승용	일부관리	2018.11.23.~2019.12월 점검사항 누락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차량 기록관리 소홀

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제10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관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및 차량 정비(수리) 내역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운행·관리 중인 업무용 차량 13개팀 48대 차량 중 8개팀 12대에 대하여는 [표 3] 과 같이 감사기간(2017. 9월 ~ 2020. 11월) 해당 기록사항을 미관리(4개팀, 4대) 하거나, 일정 기간 및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일부만 관리 (6개팀 10대)하고 있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차량 기록관리 미관리 및 일부관리 현황

연번	관리부서	차량번호	차종	기록관리		
				대상	관리 여부	관리 세부사항
1	◇팀	□	승합	정비내역	일부관리	정기점검 결과지만 보관
2	◎팀	◎	화물	운행일지	일부관리	2018.3.24.~8.27. 미관리
3	♣팀	◆	승합	정비내역	일부관리	2017.~2019. 미관리
4	♣팀	●	화물	정비내역	일부관리	2017.~2019. 미관리
5	●팀	□□	화물	운행일지	일부관리	2020. 유류수령 사항 누락
6	●팀	●	승용	운행일지	일부관리	2018.~2020. 전기충전 사항 누락
7	●팀	◇◇	승합	운행일지	일부관리	2020. 유류수령 사항 누락
8	●팀	◇◇	승합	정비내역	미관리	
9	●팀	●	승용	정비내역	일부관리	주간점검표와 함께 편철
10	●팀	■ ■ ■	승용	정비내역	미관리	
11	●팀	◆ ◆ ◆	승합	정비내역	일부관리	정기점검 결과지만 보관
12	☆팀	☆	승합	정비내역	일부관리	정기점검 결과지만 보관
13	○○팀	● ● ●	승합	정비내역	미관리	
14	◆팀	△ △	승용	이력카드	미관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업무용 차량 표시 미부착 및 오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업무용 차량의 주간차량점검표 작성 및 차량 기록관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7]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부정승차자 부가금 납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에 따르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부가금)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적용지역에 입장한 때,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승차권을 무효로 한 때,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 그 초과 인원, 도난, 분실 등 사고처리 된 교통카드를 사용한 때 승차구간 보통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대하여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2014년 「부정승차자 부가금 납부처리 업무 지침」⁹⁾을 수립하여 부정승차 부가금 미납부자 대응절차를 [표 1] 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전산시스템에 독촉사항(1차, 2차, 3차)을 추가하여¹⁰⁾ 관리하고 있다.

【표 1】 부정승차 부가금 미납부자 대응절차

단 계	대 응 처	대응방법	세부 대응방법
1단계(즉시납부)	역	· 현금/카드 특종처리 (영수증 발행)	· 현금납부 : 운임요금영수증 발급 · 카드납부 : 특종입금유형 [카드납부] 선택 (즉시납부 어려울 시, 계좌입금 안내)
2단계(납부지연)	역	· 전화 납부안내 · 최후독촉(고발예고)	· 납부기간(7일) 경과 시 전화 연락 (3회 이상, 납부기회 부여)
3단계(납부거부)	본사	· 최종미납자 고발	· 증거채증 등 관련자료 첨부 후 고발 (부가금 납부완료 시 취하장 제출)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공사에서는 감사일 현재 [표 2] 와 같이 2017. 7월 이후부터 2020. 10월까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중인 부가금 미납부 543건 44,851천원(3회 독촉 301건, 18,363천원, 3회 미만 독촉 242건 26,488천원)에 대하여 부가금 징수를 위한 추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른 부가금 납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미납자 고발에 필요한 신분 확인 등에 대한 공사 직원의 강제 수단이 없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1회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법적인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 비용(납부고지서 발부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부정승차 부가금과 비슷해져 경제적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2014-○○○○(2014-○○), 2014.○.○○. 시행

10) □2015-○○○○(2015-○○○○), 2015.○.○○. 시행

그러나,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 징수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하고, 1회성 부정승차의 경우에도 부가금 미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점에서 경제적 실효성 문제로 추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 2】 부정승차 적발 및 부가금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

연도	적발현황		징수현황			미징수 현황		3회 독촉 현황			3회 미만 독촉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계	6,418	420,714	5,875	375,863	89.3	543	44,851	301	18,363	40.9	242	26,488	59.1
2017년	823	34,344	777	32,019	93.2	46	2,325	37	1,610	69.2	9	715	30.8
2018년	2,394	115,286	2,148	100,386	87.1	246	14,900	161	8,585	57.6	85	6,315	42.4
2019년	2,354	183,042	2,158	175,107	95.7	196	7,935	93	6,593	83.1	103	1,342	16.9
2020년	847	88,042	792	68,351	77.6	55	19,691	10	1,575	8.0	45	18,116	92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정] 부정승차 부가금 중 독촉 미이행 등으로 미납부된 부가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사업소(○팀)

내 용

월미은하레일의 월미바다역외 3개 역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별표 1의 2]에 의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으며, 동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07(2016.12.6.)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반) 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는 2019년 1회, 2020년 2회에 걸쳐 ㄱ역 외 3개 역사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표1]과 같이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부분이 보고되었다. 누수 및 철근 노출은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철근부식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안전점검 용역 결과

용역시기	결 함 내 용				
	균열	누수	신축이음파손	철근노출	기타
2019년 하반기	80	5	1	1	19
2020년 상반기	89	4	1	1	8
2020년 하반기	77	8	0	1	6

◆ 인천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ㄱ역 외 3개 역사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 업무에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제3장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한 운연역 선로지붕 설치 공사 등 4건은 [표1]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급전(기온급강하, 신호시스템 점검) 및 외부기후환경(강우, 강설, 지붕동결)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급전 및 외부기후환경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에게 공사지연 일수에 대한 실정보고를 제출 받고 공기 연장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공사 기간 중 강우, 강설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표1]과 같이 공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다.

[표1] 선로지붕설치공사 공사기간 연장 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요청일수	연장일수
		당 초	변 경		
ㄱ역	(주)남양산업	‘17.08.25.~12.22.	‘17.08.25.~’18.01.05	5일	14일
ㄴ 외 1역	(주)동화	‘17.10.30.~12.28.	‘17.10.30.~’18.01.12.	10일	15일
ㄷ 외 1역	광산산업(주)	‘17.10.30.~12.28.	‘17.10.30.~’18.01.12.	10일	15일
ㄹ 역	(주)승지	‘17.10.30.~12.28.	‘17.10.30.~’18.01.12.	10일	15일

◆ 인천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주의] 천재지변, 강우, 강설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기간 중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기간 만큼에 대해 연장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0]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인천교통공사 ○처에서는 [표 1]과 같이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¹¹⁾ 633대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월 1회 이상)을 대행하도록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승강기 설치현황 (2020. 11. 25. 기준)

구분	총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비고 (유지관리 용역업체)
		소계	외부	내부	소계	무빙워크	외부	내부		
계 (56개 역사)	633대	197대	86대	111대	433대	6대	118대	309대	3대	-
1호선 (29개 역사)	312대	83대	35대	48대	226대	6대	61대	159대	3대	<P.O.G 계약 ¹²⁾ > 주식회사 ○○
2호선 (27개 역사)	321대	114대	51대	63대	207대	-	57대	150대	-	<P.O.G 계약> 주식회사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설비를 말함.

12) P.O.G(Part Oil Grease) 계약이란 단순유지관리 계약을 말하며, 일정기간의 월정 보수료를 정하고 고장이나 부품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F.M(Full Maintenance) 계약보다는 비용이 저렴함.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197대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내 승객간힘 장애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총 149건 중 호선별로는 1호선 52건(35%), 2호선 97건(65%)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인버터 고장 등 기기이상 106건(71%)과 도어셀 이물질 끼임 및 순간단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43건(29%) 발생하였으며, 장치별로는 도어부 75건(50%), 제어부 49건(33%), 안전장치 11건(7%), 기타(단전 등) 10건(7%), 구동부 4건(3%)순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승객 구출시간은 5분 이하 84건(56%), 5~10분 37건(25%), 10분 초과 28건(19%)이며, 구출 주체로는 역무원 104건(70%), 설비파트 27건(18%), 용역업체 18건(12%)순이었다.

【표 2】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엘리베이터 승객간힘 장애발생현황 (2020. 11. 25. 기준)

구분	호선별		원인별		장치별					승객 구출	
	1호선	2호선	기기 이상	외부 요인	도어부	제어부	구동부	안전 장치	기타 (단전 등)	초동조치	구출시간
계 (총 149건)	52건	97건	106건	43건	75건	49건	4건	11건	10건	역무원 104건 설비파트 27건 용역업체 18건	5분 이하 84건 5~10분 37건 10분 초과 28건
2018년 (총 63건)	14건	49건	39건	24건	32건	19건	1건	4건	7건	역무원 49건 설비파트 12건 용역업체 2건	5분 이하 37건 5~10분 15건 10분 초과 11건
2019년 (총 69건)	32건	37건	56건	13건	32건	26건	2건	6건	3건	역무원 42건 설비파트 11건 용역업체 16건	5분 이하 38건 5~10분 16건 10분 초과 15건
2020년 (총 17건)	6건	11건	11건	6건	11건	4건	1건	1건	0건	역무원 13건 설비파트 4건 용역업체 0건	5분 이하 9건 5~10분 6건 10분 초과 2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고장빈도가 높은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내 승객간힘 장애가 발생한 총 149건 중 기기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106건(71%)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년 도어부와 제어부에 집중되는 등 주요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 ○처에서 정기적인 고장발생이력 분석을 토대로 고장빈도가 높은 고장빈발부품을 선별하여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으로 별도 관리(교체주기 설정)하고는 있으나, 해당 부품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지 않았고 고장 분석을 통해 수립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차기년도 연간 유지보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내 승객간힘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장빈도가 높은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의 적정 보유수량을 설정하여 차기년도 부품의 조달계획에 반영·확보, 고장 분석을 통해 수립한 개선 대책을 연간 유지보수계획에 반영, 유지보수 결과에 대한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의 분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차기년도 고장 분석 시 피드백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 주요 부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전체 역무원 대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의 이수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제7조에 따르면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은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내 승객간힘사고 발생 시 5분 이내에 승객을 구출한 84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무원이 전체 84건 중 72건(86%)을 구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승객 구출을 위해서는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접근 가능한 역무원의 초동조치 능력 배양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동종 유관기관에 비해 형식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아닌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비상구출운전 능력 배양으로 엘리베이터 간힘사고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승객 구출을 도모하고자 전체 역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를 추진 중에 있다.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은 법정 교육기관인 △△의 연간 교육일정에 따른 교육 횟수, 장소 및 인원 등에 제한이 있어 [표 3]과 같이 2020. 1. 1. 기준, 전체 역무원 440명 중 228명(52%)만 이수하는 등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선 전체 역무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 독려가 필요하다.

【표 3】 전체 역무원 대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현황 (2020. 1. 1. 기준)

구 분	교육대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비 고
		이수인원	이수율	
계	440명	228명	52%	
1호선 역무안전센터(직영) [16개 역사]	143명	63명	44%	
1호선 역무안전센터(도급) [13개 역사]	130명	71명	55%	
2호선 역무안전센터 [27개 역사]	167명	94명	56%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 [개선] ① 고장빈도가 높은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평상시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엘리베이터 고장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엘리베이터 내 승객간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출을 위하여 전체 역무원 대상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의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1]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월미바다열차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사업소(△팀)

내 용

인천교통공사 ○사업소에서는 관광용 궤도운송수단 사업으로 [표 1]과 같이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월미바다열차 일반현황 (2020. 11. 25. 기준)

시설현황	차량	궤도	전력	신호/통신	안전설비
4개 역사 순환, L=6.1km (월미바다역 ~ 박물관역)	46인승 5편성 (2량 1편성)	3선 레일	배터리 공급	자동 및 수동운전 겸용 (안전요원 탑승)	- 전 구간 비상대피로 - 차량 실내 및 역사 내 CCTV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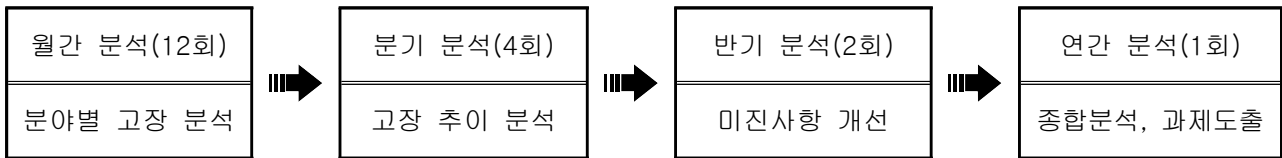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열차 고장 및 운행장애 정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수립 강화 필요

「월미바다열차 운영관리내규(내규 제677호)」 제76조, 제97조에 따르면 궤도차량 점검·정비자는 궤도차량의 상태확인 및 검사시행을 위하여 주요 검사 및 운전 장애에 관한 사항, 주요 부품의 교환 등의 궤도차량 유지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열차 운행 중 기계의 결함·고장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또는 열차 운행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동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팀에서는 차량시스템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표 2]와 같이 주기적 고장 분석 및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 월미바다열차 주기적 고장 분석 및 안정화 대책 시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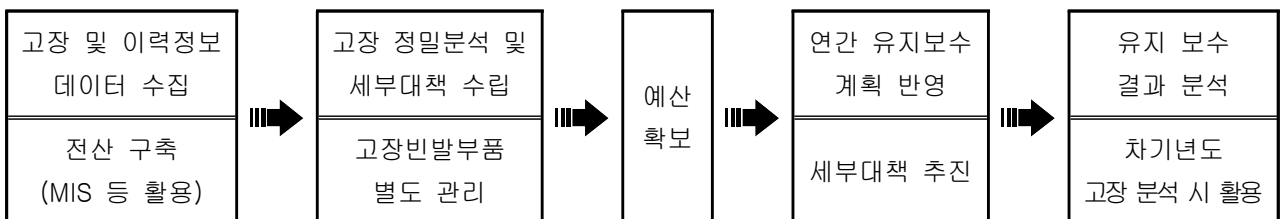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팀에서 월미바다열차 개통이후 고장 및 운행장애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지연운행의 80%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열차 지연운행과는 무관한 열차 고장 역시 차량, 신호, ABCS(배터리 자동교환장치), 설비, 통신, 천차대, 궤도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열차 고장 및 운행장애 분석 시 분야별·장치별 단순한 고장건수 및 추이 분석, 조치사항에 대한 나열에 그치고 있어,

[표 3]과 같이 열차 운행 시에 발생하는 각종 고장 및 이력정보 데이터를 인천교통공사 MIS(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산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고장 원인 정밀분석 및 대책 수립, 고장빈도가 높은 고장빈발부품을 선별하여 주요 부품으로 별도 관리(교체주기 및 적정 보유수량 등 설정), 대책 수립한 세부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유지보수계획 수립에 반영, 유지보수 결과에 대한 분석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표 3】 월미바다열차 고장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수립 절차(예시)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열차 유지관리 부품의 체계적인 재고관리 필요

월미바다열차가 착공 11년 만인 2019. 10. 8. 개통이후 이틀 만에 차량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전달장치의 기어가 마모돼 열차운행이 2차례 중지됨에 따라 열차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품 등 주요 유지관리 부품의 보유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사기간 내 ○사업소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총 184종 402점의 유지관리 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부품별 제조년월일, 내용연수(교체주기), 적정 보유수량 등의 기준 설정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부품의 입·출고 관리가 전체 부품이 혼재된 채 ‘자재불출 관리대장’에 수기 작성·보관하는 등 전산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인천교통공사 MIS(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표 4】 월미바다열차 유지관리 부품의 보유현황 (2019. 12. 31. 기준)

분야별	장 치 명	보유수량	비고
	계	184종 402점	
차 량	동력장치, 배터리팩, 안전장치, 전장장치, 대차장치, 소모품류 등	54종 154점	주행륜 타이어 등 소모품만 자체구매 (그 외 부품은 제작사가 납품한 예비품)
신 호	신호방식, 실내설비, 현장설비, 관제설비, 차상장치	23종 50점	전체 제작사가 납품한 예비품
통 신	전송설비, 통합교환설비, CCTV설비, 행선안내설비, 방송설비 등	24종 49점	전체 제작사가 납품한 예비품
전차대	카드류, 센서류, 락킹장치, 구동모터	7종 11점	락킹장치, 구동모터만 자체구매 (그 외 부품은 제작사가 납품한 예비품)
P S D	제어부, 구동부, 센서류	5종 17점	전체 부품 자체구매
승강설비	제어부	2종 2점	전체 부품 자체구매
기 계	위생설비	35종 74점	전체 부품 자체구매
전 기	전기실 ACB, 변전소 PT & PF	5종 11점	전체 부품 자체구매
ABCS	작동부, 제어부	29종 34점	전체 부품 자체구매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선안내게시기 활용을 통한 열차 이용객에게 불거리 제공 필요

○사업소에서는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역사 내 대합실 및 승강장(플랫폼)에 설치된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 노선도 및 역사별 열차위치, 역사별 주변 관광지 안내 동영상, 사일로 벽화 제작과정 동영상을 반복하여 표출하고 있다.

월미바다열차 운행간격이 11~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열차 대기 중인 이용객을 위해 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 행선안내게시기를 활용하여 현재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월미바다열차 홍보 동영상(4분 39초)’, 2020년 7월 조성한 ‘월미바다역 등 4개 테마역사 홍보물(슬라이드 사진)’, ‘시정 홍보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불거리 제공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 [개선] ① 각종 고장 및 이력정보 데이터를 전산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고장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월미바다열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는 열차 유지관리 부품의 입·출고 관리 등은 전산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고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아울러, 열차 대기 중인 이용객을 위하여 행선안내게시기를 활용한 다양한 불거리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2]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인천도시철도 1호선 2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교통공사

관 계 부 서 ○처(△팀)

내 용

인천교통공사 ○처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후 이용승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호선 증장기 수송소요예측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열차 내 혼잡도가 2025년 최대 159.7%(법적 권장기준: 혼잡도 150%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첨두시간대 운행간격 단축(현재 3분 22초 → 3분) 및 열차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2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동차 구매와 더불어 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 증차되는 전동차의 운행에 추가로 필요한 열차제어시스템의 구매가 2019년 12월 지상 및 차상신호장치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각종 설비 및 장치의 개별성능 등 공종별 시험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0. 10. 31. 기준 공정률은 [표 1]과 같이 계획 76.0%, 실적 74.3% (계획대비 97.8%)로 2021년 12월 정상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1】 인천도시철도 1호선 2사업 분야별 공정률 (2020. 10. 31. 기준)

분야별	합계	차량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안전
계획(%)	76.0	74.5	90.0	49.7	90.7	100.0	50.9
실적(%)	74.3	67.8	90.0	47.5	89.8	100.0	50.9
대비(%)	97.8	91.0	100.0	95.6	99.0	100.0	1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외자재인 신호설비가 가격협상이 지연되어 2019년 12월 계약 체결됨에 따라 계획 공정률이 49.7%로 타 분야 공정률에 비해 낮은 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반입 지연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2021년 12월 정상운행을 위해선 해당 신호설비의 국내 반입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납품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각 시스템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성능 확인 등 공종별 기능시험, 전동차 예비주행시험, 본선시운전 및 종합시험운행 등 향후 남아 있는 공정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권고] 타 분야에 비해 낮은 계획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호설비 등 향후 남아 있는 공정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시민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